5일째 기름제거 총력… 완전 해소 10년 걸릴 수도

여수 기름 유출

당국 "2주면 방제 마무리"에 환경 전문가들 반박

방제선 253척·인력 5천여명 동원 불구 오염 확산

여수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경남 남해안까지 확산할 양상을 보이면서 당국이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방제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에선 2주일 정도면 방제작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31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또 원유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에서 여수 청정해역을 구하고자 하는 당국과 지역민들의 노력과 방제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원유 유입으로 인한 피해 예상 어장은 여수시 신덕·오천·만흥해역 등 3개 어촌계에 총 296.09ha. 어업별로 보면 ▲마을어업 5건·254.09건 ▲패류 양식 4건·30ha ▲정치망어업 1건·2.5ha ▲구획어업 19건·9.5ha 등이다.

원유 제거에 참여한 인력은 지난 3일 현재 모두 4861명이며 이들이 갯바위 등지에서 기름기를 닦아낸 폐부직포 양은 117.7t이다.

해경 경비정 59척과 방제정(민간포함) 43척이 방제작업에 동원됐으며 여수시가 보유한 관공선 6척과 어민들이 보유한 어선 145척 등 모두 253척이 동원됐다.

이 같이 해경 등은 원유 유출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제작업을 펴고 있지만 기름띠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하루에만 만조·간조 등 네 차례 일어나는 등 조류와 풍향·풍속 등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유출된 기름이 어디로 어떻게 확산할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자원봉사자(123만명)·기름 제거용 걸레(73만6329kg)·굴삭기와 트랙터 등 방제장비(2만9000대)가 동원됐지만 옛 모습을 되찾기까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앞서 지난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씨프린스호' 좌초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5000t 유출)는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8000ha 이상의 해역을 오염시켰다. 회복하기까진 10년 이상 걸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얘기다.

해경은 충남 태안이나 여수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지켜보고서도 이번에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 제거에 1~2주일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기름 제거는 되더라도 옛 모습을 되찾기까진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은 "20여 년 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도 사고 해역 주변에서 기름이 발견됐었다"며 "당국이 방제 종료 선언을 할 땐 신중을 기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갈 길 먼 피해보상

해수부 "GS칼텍스 1차 보상 나서야"

6일 첫 피해보상 대책회의 주목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보상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여수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과 관련 원유사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기름 유출로 어민들이 조업에 피해를 본 부분에 관한 보상 문제는 어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안을 검토해 주민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여수에서 열리는 첫 피해보상 대책회의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부검토 결과 이번 기름유출사고가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에서 기름이 샌 사고이므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니며,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적 다툼도 예상된다. 해수부의 안대로 GS칼텍스 측이 1차 피해보상에 나서고 피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지도 미지수다. GS칼텍스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이후 감정평가액 산정 수준과 구상권 청구 결과에 따라 유조선의 선주에게 보상 지급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보상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첫 번째 피해보상 타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고, 당시 보상률은 24.2%에 그쳤다. 보상액은 공동어업 37건을 제외한 개인 피해자 1700여명 중 피해서류를 제출한 1300여명이 청구한 422억8800만원이었다.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도 지난한 보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이 보상금과 별도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사고발생 6년 만인 지난해 말 3600억원을 내놓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출연금의 분배 문제와 주민 피해 청구액 4조2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사정액 등으로 피해주민들이 사정액 산정이나 국제기금에 이의를 제기해 12만 건 이상의 소송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민주당 전병헌(오른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와 주승용·우윤근 등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4일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수시 신덕동 신덕마을을 찾아 기름 범벅인 된 갯가에서 돌을 닦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

민주당 방제·피해복구 지원 나서

당직자·봉사단 등 200여명 참여

"윤진숙 언행 부적절 문책해야"

민주당 전병현 원내대표와 광주·전남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봉사단 200여명이 4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 기름유출 현장에서 방제작업 및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피해복구 활동에는 전병현 원내대표를 비롯, 임내현 광주시당 위원장,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 김성곤·이낙연·주승용·우윤근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전남도당 민생지원봉사단원 2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피해가 심한 여수시 신덕동을 찾아 현지 주민들을 위로하고, 바위와 모래에 붙은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벌였다.

여수가 지역구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이날 방제작업 지원활동 및 피해어촌마을인 여수시 신덕동 주민들의 피해상황 등을 청취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주민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 신항 오리 폐사체 영암 신북선 의심 신고

AI공포

전남도, 정밀검사 의뢰

전국 280만마리 살처분

여수 신항 부근에서 물오리 폐사체가 발견됐고 영암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또 이번 AI로 이날 현재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전국적으로 267만6000마리이며 피해 규모는 6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폐사한 물오리는 여수 기름 송유관 파손으로 유출된 기름제거 작업에 나선 주민들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물오리는 기름유출 피해 등 자연폐사로 보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신안과 영암에서 발견된 청둥오리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바 있다.

또 전날 영암 신북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AI의심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3~4일 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 농가는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영암 덕진 씨오리 농장과는 10㎞ 경계지역 안에 있고 오리 1만5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또 정부에 따르면 4일까지 AI로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7만6000마리를 살처분했고, 앞으로 15만 마리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추가 발병 농장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살처분 마릿수는 약 284만마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2006~2007년 2차 AI 발생 때 살처분한 280만마리와 거의 같은 규모다. 이에 피해액도 당시와 비슷한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차 발생 때 정부 지원액은 339억원이었는데 살처분 보상금이 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금이 15억원, 수매자금이 26억원, 가축 입식 자금 융자액이 41억원, 경영안정 자금 융자액이 4억원에 달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해남 송지, 나주 세지, 영암 덕진 2건 등 4건의 의심신고가 들어와 영암 덕진 1건을 제외한 3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에 AI 발생 농가 주변 3㎞ 안에 있는 19개 농가의 닭·오리 35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내 AI 감염자 있었다

10명 항체 확인… 증상 없어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

국내에서 지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형 AI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국내에서도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나왔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감염의 증거인 것이다.

다만,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도 AI 바이러스가 이들의 몸 안에 침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AI 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연합뉴스